

〈일반논문〉

대한민국임시정부의 萬寶山 사건 인식과 대응* : 혐오와 차별의 공간적 팽창 차단

김 주 용 **

〈목차〉

- I. 머리말
- II. 만보산 사건의 배경
- III. 만보산 사건의 전개
- IV. 임시정부의 만보산 사건 인식과 대응
 - 1. 임시정부와 상해 한인사회의 만보산 사건 인식
 - 2. 조소앙의 만보산 사건 대응 : 혐오와 차별의警戒
- V. 맺음말

[국문초록]

20세기 동북아시아의 위기를 촉발시켰던 중요한 것은 각 공동체간의 혐오와 그로 인한 민족적 차별과 갈등의 폭발이었다. 이 글은 1931년 7월 만주(중국 동북)에서 일어난 만보산 사건이 혐오와 차별의 공간적 팽창의 현상임을 파악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대응했던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입장을 파악하였다. 임시정부는 1919

* 이 글은 2021년 8월 5일 인천대학교 중국학술원이 개최한 만보산 사건 90주년 기념 학술회의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 보완하여 게재한 것이며, 2017년 대한민국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7S1A6A3A0279082).

** 원광대학교 한중관계연구원 부교수

년 4월 상해에 성립된 이후 한국독립운동의 사령부 역할을 담당하였다. 하지만 너덕하지 못한 자금과 인적 수급 문제로 난관에 봉착하기도 했다. 특히 만보산 사건과 한반도 내에서 화교배척사건이 연동되면서 임시정부는 혐오와 차별의警戒를 명확하게 천명하였다.

왜냐하면 제국주의 일본의 간계로 발생한 만보산 사건이라고 할지라도 이를 바라보는 중국 측 시선이 곱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임시정부는 외교부장 조소앙 명의로 만보산 사건의 해결책을 제시하였으며, 그것은 동북아시아에서 민족적 혐오와 차별을 극복하고 제국주의 일본에 공동 대응책을 강구하면서 평화를 실현하자는 제안이었다. 공생과 상생의 공동협의를체를 구성하려고 했던 것이 만보산 사건에 대한 임시정부의 대응책이었다.

□ 주제어

만보산 사건, 혐오, 차별, 화교, 대한민국임시정부, 조소앙

I. 머리말

1931년 7월 중국 吉林省 長春 외곽의 한 농촌에서 이주한인과 중국인 사이에 농수로 문제로 일촉즉발의 대결이 벌어졌다.¹⁾ 이른바 萬寶山 事

1) 만보산 기념비는 현재 吉林省 長春直轄市 德惠市 米沙子鎮에 건립되어 있다 (2002년 독립기념관 조사 및 2012년 학술공동조사 당시 확인). 이 기념비는 1985년 건립되었는데, “長春市 重點文物單位 萬寶山 事件 舊址, 長春市 人民政府 1985年 12月 公布, 德惠縣 人民政府 立”이라고 각자되어 있다(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국의 항일운동 유적지 실태조사 보고서』 1, 2002, 82쪽). 만보산 사건 기념비의 소재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할 만하다. “만보산 사건이 있었던 마소구까

件이었다. 제국주의 일본의 한반도 강점은 만주지역으로 농민들의 ‘송출’을 촉진하는 촉매제였다. 1910년대부터 꾸준히 증가한 만주로의 한인 이주 물결은 현지 중국 농민과 마찰로 나타나기도 했다. 이러한 분쟁의 싹을 제거하기 위해 민족운동가들은 북간도 지역 ‘간민회’와 서간도 지역 ‘한족회’ 등을 설립하여 이주한인들의 정착과 보호에 힘썼다. 하지만 자치단체를 설립하고 운영한다고 해서 만주 모든 지역에서 이주한인들이 보호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각종 변수가 많았다. 중국 지방정부와 중국인 지주의 태도, 제국주의 일본의 기관 입장에 따라 한인들의 처지는 흔들릴 수밖에 없었다. 만보산 사건은 자체로서의 중요성도 있지만 제국주의 일본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세 틀을 마련하는 데 이용되었다는 점에서 주목되었다. 바로 국내에서 벌어진 배화(排華)사건이 그것이다.²⁾

만보산 사건은 중국인과 이주한인 간 갈등과 충돌 양상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였다. 1970년대 말 만보산 사건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서로 발간된 박영식의 『萬寶山事件研究』는 바로 이런 경향을 대표하고 있다.³⁾ 이 연구서 이후에도 만보산 사건에 대한 연구 성과들은 꾸준히 나오고 있다. 만보산을 둘러싼 국제관계, 재만한인문제, 화교에 대한 한인의 학살, 법적문제, 만보산 사건에 대한 언론 보도양태 등 다양한 연구 성과

지 만보진에서 14km 정도 떨어져 있다고 하였다. 가는 길은 엉망이었고 약 1시간 정도 걸리었다. 만보산에 도착하니 물이 줄어든 이통하가 보였고, 이통하 건너편에 한국인 마을이 있었던 곳은 논으로 변하였다(박환, 『만주지역 항일독립운동사 답사기』, 국학자료원, 2001, 111쪽).

2) 넓은 범위에서 만보산 사건 즉 한반도 거주 중국인에 대한 폭력 행사 사건의 명칭은 사건 당대에는 ‘배화’사건으로 불렸다. 1931년 7월 2일부터 발생한 중국인을 배척하는 폭력은 한반도 전역을 휩쓸었다. 수많은 중국인 사상자가 발생하였으며, 이에 대한 명칭 역시 ‘화교배척사건’, ‘배화폭동’, ‘반중국인폭동’ 등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사건의 주체와 대상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명칭이 달라진 것 같다. 이 글에서는 당대의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고자 한다.

3) 朴永錫, 『萬寶山事件研究』, 一潮閣, 1978.

도 나왔다.⁴⁾

이러한 연구 성과 가운데 고바야시 레이코의 글은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먼저 그는 『리튼조사보고서』와 만보산 사건을 연결하면서 이주한인들의 생활실태, 그 가운데 토지소유권의 획득 과정에서 나타난 일본 측의 교묘한 편법 현상에도 주목하였다. 이주한인들이 처한 지위에 대하여 리튼조사위원회가 내린 결론이 ‘시선’보다는 ‘사실’에 입각하였음을 밝혔다. 각 나라의 입장이 투영된 한인의 위치가 아닌 즉 박해를 받고 있으면서도 배려받지 못하고 있는 한인들의 지위가 사실이란 점을 드러냈다.⁵⁾ 송한용은 1920년대 張學良 정권과 만보산의 遠因을 밝히는 글에서 水田을 둘러싼 중국과 일본의 알력, 한인들의 법적 지위 및 경제적 열악성 등의 상관성에 주목하였다. 수십 년 전에 이주했던 한인들은 장학량 정권에서 ‘귀화’를 강요당하거나 일제의 대항마로 인식되었다. 그는 중국 지방관료들의 일관성 없는 법 집행이 한인들의 피해로 이어졌으며, 이것이 고스란히 만보산 사건을 잉태하였다고 지적하였다.⁶⁾ 이후 만보산 사건 전반에 대

4) 만보산 사건에 대한 연구 성과는 다음과 같다. 손승희, 「만보산 사건과 중국 공산당」, 『동양사학연구』 83, 동양사학회, 2003; 손승희, 「만보산 사건과 중국의 언론」, 『역사문화연구』 28, 한국외국어대 역사문화연구소, 2007; 손승희, 「1931년 식민지 조선의 배화폭동과 화교」, 『중국근현대사연구』 41, 2009; 손승희, 「근대 한중관계사의 새로운 시각 모색 -萬寶山事件 연구에 대한 적용가능성을 중심으로」, 『역사학보』 202, 2009; 고바야시 레이코, 「만보산 사건과 리튼보고서-재만조선인에 관한 조사결과를 중심으로-」, 『만주연구』 11, 2011; 송한용, 「張學良정권의 對한인정책」, 『만주연구』 11, 2011; 이준식, 「만보산 사건과 중국인이 조선인식」, 『한국사연구』 156, 2012; 윤상원, 「만보산 사건과 조선인 사회주의자들의 중국인식」, 『한국사연구』 156, 2012; 최병도, 「만보산 사건 직후 화교배척사건에 대한 일제의 대응」, 『한국사연구』 156, 2012; 정병욱, 신설리 패, 「중국인 숙소에 불을 지르다-1931년 반중국인 폭동에 대한 재해석」, 『역사비평』 97, 2012.

5) 고바야시 레이코, 「만보산 사건과 리튼보고서-재만조선인에 관한 조사결과를 중심으로-」, 『만주연구』 11, 2011.

6) 송한용, 「張學良정권의 對한인정책」, 『만주연구』 11, 2011.

한 연구사를 정리한 논문이 발표되었고,⁷⁾ 만주에서 활동했던 한국독립운동 단체의 만보산 사건 인식과 대응을 다룬 연구 성과도 나왔다.⁸⁾

하지만 1919년 4월 중국 상해에서 성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만보산 사건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거나 독립운동가들의 인식이나 대응을 분석한 연구는 거의 없다.⁹⁾ 그 이유는 첫째 만보산 사건을 이주한인과 중국 농민 문제로 바라보면서 정작 임시정부의 존재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데 있는 것은 아닌가 한다. 둘째 임시정부 요인들이 만보산 사건에 발표한 글들이 많지 않았다는 점도 작용하였을 것이다.¹⁰⁾

7) 윤상원, 「한국역사학계의 만보산 사건 연구동향과 과제」, 『한국문화연구』 51, 2016 참조. 손승희는 만보산 사건에 대한 중국 국민당과 공산당의 시각이 달랐으며, 국민당은 일제의 대륙침략 정책이 목적이었다고 보았고, 공산당은 중국인과 조선인의 적대적 민족 감정을 이용한 반일세력의 와해에 있다고 인식했다(손승희, 「만보산 사건과 중국공산당」, 126쪽).

8) 장세운, 『중국동북지역 독립운동사』, 도서출판 선인, 2021, 388~394쪽.

9) 만보산 연구의 개척서인 박영석의 『萬寶山事件研究』에도 아주 일부만 언급되어 있을 정도이다(朴永錫, 『萬寶山事件研究』, 123~124쪽).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았지만 만보산 사건에 대한 조선의용대의 인식은 다음의 기사를 통해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 “일본제국주의는 1910년 조선을 침략한 이후부터 9.18사변을 거쳐 현재에 이르기까지 시종 중국민족과 조선민족 사이를 이간질하고자 갖은 방법을 총동원하였다. 중국을 향한 침략의 야욕이 거세질수록 이에 비례하여 필연적으로 중국 내부의 통일이 가속화되고 조선민족의 반항 역시 거세질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적들은 일면 중국의 항전 역량을 감소시키고 다른 한편으로 조선민족을 고립시키기 위해 중한 두 민족의 감정을 이간질시키는 동시에 두 민족 간에 배척감을 최대화시키기 위해 갖은 술수를 다하였다. 9.18사변 직전에 발생한 만보산 사건과 이로 인하여 조선 경내에서 폭발한 대대적인 화교배척운동은 중한 두 민족의 감정을 이간질시키려는 일본제국주의의 음모가 분명하게 드러난 대표적인 사건이다. 일본제국주의는 9.18사변 이후 본격적, 계획적으로 터무니없는 악랄한 선전에 열을 올렸다. 적들은 조선민족에게는 중국민족은 정의감도 없고 나약하며 야만스러운 민족이라고 악선전을 하면서 동북지역에서는 중국민족을 부추겨 조선민족과 충돌을 확대시키고자 하였다”(『救亡日報』 1937년 9월 8일, 「중일전쟁과 조선민족」). 이 의견을 실어준 『구망일보』는 郭沫若이 상해에서 발행한 신문이었다. 이는 1937년 중일전쟁 이후 한국과의 공동항일투쟁이 필요했던 상황이 투영된 것이라 보여진다.

이 글에서는 기존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임시정부를 비롯한 상해지역 독립운동진영의 만보산 사건에 대한 인식과 대응양태를 조망하고자 한다.¹¹⁾ 대한민국임시정부는 만보산 사건으로 한인에 대한 그릇된 인식과 왜곡된 실상이 공간적으로 확장되는 것을 차단하고 독립운동의 지속성을 담보하고자 했다. 1931년 10월 김구가 한인애국단을 조직한 이유 가운데 하나도 여기에 있다. 즉 만보산 사건으로 촉발된 민족 간의 갈등과 차별, 혐오의 현상이 한인애국단 설립으로 이어지고 중국 관내 독립운동 진영에게는 한중공동항일투쟁의 확장으로 표출되었다.¹²⁾

따라서 이 글은 임시정부 요인들의 담화문을 중심으로 상해 한인사회의 만보산 사건에 대한 인식의 양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임시정부의 외교부장이었던 조소앙의 만보산 인식과 대응을 『소앙집』을 통해 분석하고자 했다.¹³⁾ 혐오와 차별을 만보산 사건에 적용시킨 제국주의 일본은 대륙침략의 ‘소모품’으로 이주한인을 활용하였으며, 이를 극복하고 공동 반제국주의 전선을 형성해야 하는 것이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입장이었다. 이 민족에 대한 차별과 혐오는 오늘날 21세기 동북아 곳곳에서 자행되고 있다. “신 만보산 사건”의 조짐이 없는지 깊이 성찰할 시기라고 여겨진다. 이 글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10) 백범 김구를 비롯한 많은 임시정부 요인들이 회고록이나 자서전을 남겼지만 만보산을 심도 있게 언급한 것은 거의 없다. 예컨대 『백범일지』에는 ‘만보산’은 아예 언급하지 않았으며, 정정화의 『장강일기』에도 ‘만보산’은 없다.

11) 신용하는 만보산 사건을 관동군이 조작한 사건으로 인식하였으며, 중국인의 반한 감정이 극도에 달하여 이제는 만주와 중국 관내에서 한국 독립운동이 불가능하게 되어버렸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 임시정부가 조직한 단체는 한인 애국단이었다(고정휴 외, 『대한민국임시정부의 현대사적 성찰』, 나남, 2010, 44쪽).

12)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민족주의 시각으로 한중연대가 국제주의로 승화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연구가 진행되지 못했으며, 이 글에서 충분히 다루지 못했다.

13) 조소앙 지음, 김보성, 임영길 옮김, 『소앙집』, 한국고전번역원, 2019.

II. 만보산 사건의 배경

1920년 10월 제국주의 일본은 대규모 군대를 파견하여 서간도와 북간도 지역 이주한인들을 학살하였다. 이른바 경신년 간도 한인 제노사이드였다. 이 사건 이후 일제는 북경정부와 동북지방 정권을 상대로 이주한인 단속 정책을 실현하고자 했다. 만주지역에서 일제는 막강한 자금력과 기술, 정치권력으로 중국을 압박하였다. 반면 중국은 토지, 자원, 우월한 정치권력을 통해 이주한인을 통제하고자 했다. 이주한인에게는 노동력과 기술 즉 수전경작의 강점이 있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중일 간의 충돌가능성은 일본인 자본과 중국인 토지의 문제였으며, 더 근본적인 부분은 정권과 정권의 문제였다. 한인과 중국의 경우 충돌가능점은 중국 관헌의 불법행위, 중국인의 수도작 기술이었다. 다만 일제 입장에서는 한인의 기술노동력과 일본인의 자본이라는 협조 가능성이 있었지만,¹⁴⁾ 변수가 더 컸다. 바로 한국 독립운동세력의 활동이었다.¹⁵⁾ 이를 억누르기 위해 제국주의 일본은 張作霖을 압박하여 三矢協定을 체결하였다.

1925년 6월 체결된 삼시협정으로 한인사회는 또 한 번 요동쳤다. 봉천 총영사관에서는 독립군들을 ‘감별’한다는 취지로 한인사회 곳곳을 수색하였다.¹⁶⁾ 대략 8가지인 한인독립운동가의 구별법을 만들어 통용시켰다. 결

14) 金三民, 『在滿朝鮮人の窮狀と其の解決策』, 新大陸社, 1931 참조.

15) 만주지역에서 활동했던 한국독립운동세력은 독자적인 그룹을 형성하여 각개 전투의 양상을 띠기도 했지만 동북군벌의 중요 요직을 차지하면서 한국독립운동을 지원한 경우도 있다. 예컨대 해산 김정묵은 동삼성 군법처장으로 활동하면서 한인 문제에 깊숙이 개입하였다. 김정묵은 1926년부터 1931년까지 군법처장을 지내면서 어려운 처지에 빠진 한인들을 도와주거나 김동삼 등 독립운동세력이 장학량과 제휴하고자 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한다(권대웅 외, 『해산 김정묵과 가문의 독립운동』, 도서출판 선인, 2021, 165~169쪽).

국 삼시협정은 한인독립운동을 탄압하는 일제와 중국 양국 간의 공동 협정이었으며, 독립운동가들에게 대한 가혹행위는 더욱 강화되었다. 삼시협정이 체결된 후 중국 측의 이주한인에 대한 탄압협정이나 규칙, 훈령은 1928년까지 66개가 쏟아져 나왔다. 독립군에 초점을 맞추었지만 실질적으로는 한인사회 전반에 걸쳐 통제와 감시가 병행되었다. 그러면서 일제는 다른 한편으로 일본영사관에서 이주한인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있다고 기만적인 선전도 실행하였다.¹⁷⁾

중국 관헌의 한인에 대한 압박수위가 높아가는 상황 속에서 일제는 張作霖 폭사사건을 일으켰다.¹⁸⁾ 만주지역에서 우위를 차지하고자 했던 일제의 극단적인 행위는 중국 측의 반일감정을 고조시켰다. 국민당 정부는 이주한인을 비롯해 일제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있는 한인사회단체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강화했다.¹⁹⁾ 중국 정부는 ‘재만한인=일본신민’이라는 정책 방침에 따라 한인들이 일제의 대륙침략 정책에 이용되고 있다고 판단하여 귀화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이주한인에게 귀화는 안정적인 생활을 담보하는 키워드였지만 조국광복 이후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였기 때문에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단순한 문제는 아니었다.

여기에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는 토지소유권을 둘러싼 만주 군벌들의 정책이었다. 만주에서 한인의 대부분은 薄弱貧窮했다. 또 교육을 받지 않았고 중국관민의 압박을 받거나 멸시를 받고 있었다. 역설적으로 일제 관헌의 힘이 미치지 않은 곳에 거주하는 한인에게 이러한 현상은 더욱 심했

16) 김주용, 『한국독립운동과 만주: 이주·저항·정착의 접이지대』, 경인문화사, 2018 참조.

17) 金正柱, 『朝鮮統治史料』 10, 335쪽.

18) 이 시점에서 주목할 부분은 관동군의 활약이었다. 관동군은 이 사건을 계기로 만주에서 그들의 존재를 더욱 확장하고 각인시켰다(中山隆志, 『關東軍』, 講談社, 2000, 70~71쪽).

19) 신주백, 『1920~30년대 중국지역 민족운동사』, 도서출판 선인, 2005, 62쪽.

다.²⁰⁾ 당시 조선총독부에서 작성한 중국 관헌의 폐해 보고서의 한 단면은 다음과 같다.

한일병합 이래 오늘날까지 계속되어 온 우리 정부에서는 외무성과 조선총독부와 관동청이 서로 긴밀하게 연락하지 않고 이 문제에 대해서 현재 日支교섭이 파괴되었다. 다만 정부에서는 재만 일본인에게 명하여 중국 관민에게 박해를 받고 있는 조선인을 보호할 것을 요청했다.²¹⁾

이주한인들의 지위는 삼시협정의 체결로 더욱 악화되었다. 중국인들은 이미 한인들을 일본제국주의의 앞잡이로 간주했으며, 이는 1931년 9월 18일 만주침략 전까지 크게 바뀌지 않았다. 삼시협정 이후 중국 지방정부에서 이주한인에 대한 단속 강화 훈령이 나오게 된 것은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가장 큰 원인은 일제의 침략 대리인이라는 점일 것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중국관헌은 한국독립운동단체를 단속한다는 구실로 이주한인들에 대해 금품을 강탈하여 私腹을 채우기도 했다. 중국관민들의 한인에 대한 탄압은 다양했다. 예를 들면 토지·가옥의 임차를 거절하거나 학교 해산 또는 폐쇄, 퇴거명령, 귀화강요, 부당과세 등이었다.²²⁾

일제 입장에서는 독립운동가와 일반인을 구별하는 것이 바람직했지만 중국 정부에서는 분리해서 정책을 취하기보다는 모든 이주한인을 같은 범주로 묶어 단속을 강화했다. 한인들은 중국인들에게는 일본의 주구로, 일본인에게는 대륙침략의 일회성 수단으로 인식되었다. 그런 만큼 한인들의 지위 악화는 불을 보듯 뻔한 현실에 직면하고 있었다.²³⁾

20) 朝鮮總督府警務局, 『在滿朝鮮人ト支那官憲』, 1930, 8쪽.

21) 朝鮮總督府警務局, 위의 책, 8~9쪽.

22) 金三民, 『在滿朝鮮人の窮狀と其の解決策』, 新大陸社, 1931, 68쪽.

23) 滿洲移民史研究會 編, 『日本帝國主義下の滿洲移民』, 509쪽.

한국독립운동단체는 이주한인들의 법적 지위가 흔들리면서 생활상의 불안이 가중되자 이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먼저 정의부는 중국 측과 외교적 교섭을 통해 관할 각 지역에 韓僑驅逐問題對策講究會 지회를 설치하도록 하였다. 1928년 2월 초 길림성에만 약 50개소의 지회가 설치되었다. 강구회의 본회와 지회를 조직한 독립운동가들은 한인의 중국 귀화 입적을 해결하기 위하여 중국 측과 타협을 시도했다. 한인이 중국인으로 귀화하려면 그 절차나 조건은 까다롭지 않았지만, 얼마의 入籍費를 관청에 지불해야만 되었다. 이 입적비는 중앙정부에 내야 하는 돈과 관할 각 현에 내야 하는 돈이었다. 중앙정부에 내는 돈은 일정했지만 각 현에 내는 비용은 제각기 달랐다. 예를 들어 삼시협정이 발표되고 난 직후인 1925년 하반기에 鳳城縣에서 한인에게 요구한 입적비는 奉票 35원이었고, 營口縣에서는 입적비 대신 僑居證書를 발급하였는데 그 수수료가 1원이었다. 증서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1년이 지나면 다시 1원을 내고 증서를 재발급받아야만 했다.

이주한인들 가운데 당장 호구를 해결할 방도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다. 따라서 입적비를 내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처지라고 중국 측을 설득하고 타협안으로 ‘入籍手續費免稅請求書’를 작성해 제출하였다. 1928년 4월 18일 민족운동자들은 한교구축문제 대책강구회를 더욱 발전시켜, 중국의 한인 구축문제뿐 아니라 이주한인들의 사회·경제·교육에 관한 전반적인 해결을 위한 기구인 ‘韓族問題聯合講究會’(이하 강구회)를 조직했다. 강구회는 만주에 이주해 있는 한인이 중국 내에서 얻을 수 있는 최대의 권리를 근본적으로 확보하자는 결론을 내렸다. 이러한 입장에서 강구회는 귀화문제를 시작으로 韓人の 公民權 취득문제, 饑饉救濟問題, 합법적 기관의 조직문제 등 이주한인들이 만주 내에서 생활하기 위한 기본권을 종합적으로 확립하고자 했다.²⁴⁾

강구회는 1928년 9월 관할지역의 각 지방대표 21명을 吉林省城에 소

집하여 회의를 열었다. 그 결과 강구회를 상설적인 한인자치기관으로 전환할 것을 결정하였다. 이 단체를 다시 '歸化韓族同鄉會'(이하 동향회)로 명칭을 바꾸었다. 동향회는 동만지방의 4개 현을 제외하고 47개 현에 거주하는 한인을 망라한 조직이었다. 독립운동가들은 동향회를 매개로 자치기관의 새로운 대안을 찾았다.²⁵⁾ 삼시협정 체결로 봉천군벌의 이주한인 압박이 점차 강화되었으며,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인지도자들은 동향회를 중심으로 한인의 권익 찾기 운동을 전개하였다. 이는 중국 봉천군벌로부터 만주지역 한인의 합법성을 쟁취하는 운동이었다. 한인이 중국인이 되는 것은 일제의 간섭에서 벗어나 중국정부로부터 합법적인 신분을 얻어 생활의 안정을 되찾는 기반이자 항일운동의 기반도 확보할 수 있는 중첩적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²⁶⁾

동향회는 이주한인의 귀화문제뿐만 아니라 한반도에서 계속 이주해 오는 한인들의 귀화에 관한 행정적인 제반 절차 및 수속을 대행해 주었다. 그리고 강구회는 1929년 3월 동향회의 간사장인 崔東晔을 남경에 있는 중국 국민정부에 파견했다. 최동오는 중국 정부의 실권자와 교섭하여 한인의 귀화비용을 경감해 준다는 약속을 받아내고 그해 10월 20일 돌아왔다. 이렇듯 이주한인 문제는 중국 지방정부 차원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에서도 복잡한 문제로 인식되었으며, 쉽게 해결할 문제가 아니었다. 그 중심에는 토지문제, 일제와 관계 등이 자리하고 있었다. 한인 문제에 또 하나의 사건은 1930년 북간도 지역에서 발생한 이른바 '간도 5.30봉기'였다. 제국주의 일본은 이 사건을 중요시하였다. 바로 이주한인 사회의 안정성이 훼손되고 한반도로 역귀환하는 한인들이 증가한다면 '대륙진출의 사명'을 띠고 있는 일제로서는 남의 집 불구경하듯 그대로 놔둘 수 있는 문제가

24) 김주용, 앞의 책, 218쪽.

25) 신주백, 『1920~1930년대 중국지역 민족운동사』, 65쪽.

26) 김주용, 앞의 책, 219쪽.

아니었기 때문이다.²⁷⁾ 만주지역 이주한인은 일제에게는 만주 칩락정책을 위해 적당히 이용하는 '준소모품'과 같은 존재였다.

Ⅲ. 만보산 사건의 전개

만주에서 수전을 경영하는 데 가장 불리한 조건은 水利에 대한 無統制였다. 만주에는 많은 하천이 흐르고 있지만, 그 수량은 일정하지 않아 관계용수로 이용가치가 높지 않다. 광활한 만주 대부분은 평야지대이다. 이러한 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14년 봉천정부 실업청은 재정청에 수리국을 신설하고 봉천성 동쪽인 동릉부터 渾河를 사용할 목적으로 운하를 내고 하루 20리까지 통하게 하였다.²⁸⁾ 만보산 사건의 발단 역시 농업용수 문제였다.

만보산은 길림성 장춘 북쪽에 위치하고 있다. 이 지역은 수전농업에 최적화된 곳이지만 대규모 농사를 위해서는 관개수로 구축이 선행되어야 했다. 1931년 4월 장춘 稻田公司의 경리 郝永德이 伊通河 기슭에 있는 만보산 지역의 미개간지 약 30헥타아르를 조차한 것을 다시 이주한인 李昇薰 등 8인이 10년 기한으로 조차 계약을 했다. 당시 한인 농민 180명을 동원하여 水路 공사를 진행하자 부근 토착 중국 농민들이 다소 피해를 입게 되었다. 이통하에서 물을 끌어오면서 중국인 소유의 토지를 경유하게 되었고, 郝永德이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한다는 명목으로 중국인 지주에게 지불할 토지승락 대금을 중간에서 착복하였다. 그 과정에서 중국인 지

27) 국사편찬위원회, 『중국한인의 역사자료집 -재외동포사총서』 15, 2013, 31쪽.

28) 손춘일, 『해방전 동북조선족 토지관계사 연구』, 206쪽.

주들이 길림성 정부에 정식 고발장을 제출하였으며, 이로 인해 郝永德은 체포되었고, 관개수로공사는 교착상태에 빠졌다.

중국 측은 5월 31일 200명의 보안대를 파견하여 공사 중지를 권고하다가 한인 9명을 체포하였다. 이에 대해서 일본의 田代 영사는 체포한 농민을 즉시 석방할 것을 요구하고 동시에 6월 2일 영사관 경찰관을 파견하고 그 보호 밑에서 공사를 강행케 하였다. 이 조치는 중국 측을 자극해서 중·일 쌍방의 무장 경관이 대치하는 상태까지 이르렀다가 6월 8일 임시 협정으로 쌍방의 경관이 물러나면서 공동 조사가 진행되었다. 6월 12일 일본 측은 협정을 어기고 다시 경관을 파견하고 공사를 강행함으로써 6월 하순에는 이통하 제방 공사를 착수하게 되었다. 이것을 본 만보산 일대의 중국 농민 약 500명은 7월 1일 농기구를 가지고 모여들어 용수로를 막은 제방을 파괴하였다.²⁹⁾ 그 다음날 다시 모인 중국인 농민과 중국 경관 300명이 동원되었는데 한인 농민은 일제의 영사경찰력을 포함한 무력만 믿고 수로 복구와 제방 공사를 계속 강행시켜 7월 11일 물길이 통하게 되었다.

제국주의 일본 영사관의 행위가 과연 한국 농민을 보호하려는 것인지 재삼 논할 필요는 없다. 다만 한중 농민 간 충돌을 침소봉대하여 악의적인 ‘가짜뉴스’를 전달하고 『조선일보』를 통해 대대적으로 국내에 유포한 사실은 향후 만주지역뿐만 아니라 관내 독립운동 세력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이러한 언론 보도로 국내에서 반 중국적 감정을 유발시켜 인천·평양·서울 등지에서 수천 명의 한국인이 중국인의 상점을 습격하고 백여 명의 중국인을 학살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³⁰⁾ 국내의 잡지 『별건곤』에는 이러한 상황을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29)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 4(임시정부사), 1983, 594쪽.

30) 박영석, 앞의 책, 100~101쪽.

7월 3일에 인천에서 폭행사건을 도화선으로 하여 인천 경성에서 박해사건이 뒤를 이어서 일어나고 평양에서는 수명의 조선인이 중국인에게 폭행한 것으로 발단하여 불행히 죽은 72명, 중경상자 118명을 내이고 그후 도립병원에서 입원 치료하다가 중상자 증으로 22명이 사망하였으며, 인천에서 중국인 2명, 경성에서 조선인 1명이 죽었고, 경관의 부상자가 75명이었고, 그 외의 평북 의주군에서 2명, 함남 안변에서 1명이 죽었고, 원산에서는 도망하다가 물에 빠져 죽은 자가 1명 있다고 했다. 그리하여 이제에 와서는 그 전부가 평온한 상태이라고 했다. 이제 그에 의하여 보면 평양을 비롯하여 인천 의주 안변 등지에서 사람이 죽었고 따라서 부상자가 많았을 것이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손해도 막심한 것이 같다. 그에 대하여 일본 정부에서는 20만 원의 구휼금을 내어 놓고 5만 원의 임시 경비(警備)비를 지출하여 그것으로 사건의 일단락을 지으려 하고 중국으로서는 구휼금을 받지 않고 국가의 배상을 요구하고 있어 방금 일본과 중국과 외교상 일대 암초가 되어 있다.³¹⁾

한편 일제는 만보산 사건으로 배화사건의 주체를 ‘조선민족’으로 규정하기 위한 외교전도 불사하였다. 특히 만보산 사건의 원인이 ‘금팔찌 하나’ 때문이라는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조사단을 현혹하기도 했다. 국제연맹조사단이 만주사변의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현지에 파견되자 대부분 사람들은 분명 일제가 사실을 위조하여 조사단을 속일 것이라 예상하였다. 더불어 일본인들이 무슨 음모를 꾸밀지 모르니 철저히 감시하고 대비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처음부터 중국의 조사위원이 국제연맹조사단과 함께 현지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였다. 다음은 『시보』에 실린 기사 내용이다.

31) 朴士淸, 「不祥事を 이르기게 한 萬寶山事件의 眞相」, 『별건곤』 제42호(1931년 8월 1일), 4쪽.

한인 대표가 국제연맹조사단에 보고하였다는 만보산 사건의 원인을 여기에 특별히 소개하여 그 황당함을 널리 알리고자 한다. 아래의 내용은 4월 28일 大阪에서 발행된 『朝日新聞』이 瀋陽에서 보내온 전문이라고 보도한 기사를 전재한 것이다. 이 기사를 실은 『조일신문』의 원래 표제는 '만보산 사건은 금팔찌 때문에 발생'이었다. 이 신문은 "4월 26일 오후 3시 만주에 거주하는 한인 대표가 국제연맹조사단에 만주사변의 단초가 된 만보산 사건의 발생 원인을 '만보산 부근에 거주하는 한인들은 수전을 경작하고자 여러 차례 중국 지방관에게 진정하고 백방으로 노력하였다. 그러나 매번 경작 신청이 허락을 얻지 못하자 부득이 우리끼리 300원을 모아 금팔찌 하나를 사서 縣長의 첩에게 선물하였다. 그 결과 얼마 뒤 현정부로부터 수전 경작허가가 떨어져 벼농사를 짓기 시작했다. 그런데 뜻밖에 문제가 발생하였다. 평소 공안국장의 부인과 가까이 지내던 현장의 첩이 한인들로부터 뇌물로 받은 금팔찌를 자랑하자 이를 시샘한 공안국장 부인이 남편에게 불평을 늘어놓았다. 부인의 바가지에 공안국장은 어쩔 수 없이 사실을 성장에게 보고하였고, 성장부는 한인의 수전경작을 취소시켰다. 이로 인하여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라고 보고하였다. 이어 한인 대표는 '외부에서는 중국관원들을 청렴하고 문명된 사람들로 보지만 이는 완전히 잘못된 시각이다'라고 중국관원들의 부패를 지적하였다."라고 보도하고 있다.³²⁾

이와 같이 일제는 만보산 사건을 마치 중국인 관료들의 뇌물로 인한 갈등으로 촉발된 사건으로 몰고 가려는 인상도 지울 수 없었다. 만보산 사건의 원인과 그 과정에 대한 일제의 시각과 일제 언론의 태도가 한중 민족간의 갈등양상을 더욱 부추기는 형국이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를 경계하고자 했던 것이 상해 대한민국임시정부와 독립운동가들이었다.

32) 『時報』, 1932년 5월 4일.

IV. 임시정부의 만보산 사건 인식과 대응

1. 임시정부와 상해 한인사회의 만보산 사건 인식

오늘날 上海 馬當路 신천지 부근에는 대한민국임시정부청사 진열관이 자리잡고 있다. 1926년부터 1932년까지 사용한 청사이다. 물론 처음 청사로 사용할 때보다 1992년 한중수교 이후 전시관으로 재개관하면서 그 면적이 늘어났다. 이곳에서 김구는 1926년 12월에 국무령에 취임했다. 『백범일지』에는 당시 상황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였다.

정부가 아무리 위축되었다고 하더라도 해주 서촌 김존위의 아들인 내가 한 나라의 원수가 되는 것은 국가, 민족의 위신을 크게 떨어뜨리는 것이므로 불가하다...(중략)...결국 나는 이 권고에 따라 국무령으로 취임하여 윤기섭, 오영선, 김갑, 김철, 이규홍 등으로 조각하였다.³³⁾

김구가 국무령에 취임했을 때 임시정부의 상황은 그리 좋은 상태가 아니었다. 첫째 예산부족으로 정부 살림살이는 항상 궁핍했다. 둘째 이승만 탄핵 이후 독립운동의 중심기관으로서 내상을 입어 각 독립운동단체의 리더 역할이 쉽지 않은 상태였다. 임시정부 요인들 역시 각자 생업에 종사할 정도였다.³⁴⁾ 이러한 가운데 김구를 비롯한 임시정부 요인들은 1931년 7월에 발생한 만보산 사건을 심각하게 인식하였다.

임시정부 내무부 위원들은 만보산 사건과 중국인 배척운동에 대응하

33) 김구 저, 도진순 주해, 『백범일지』, 돌베개, 316쪽.

34) 김광재, 『상해한인사회사 연구』, 경인문화사, 2018, 277쪽.

기 위해 매일 임시정부 청사에서 회합하였으며, 정리된 의견은 당시 상해에서 활동했던 언론인 신언준³⁵⁾을 통해 국내 언론에 보도되었다.³⁶⁾ 신언준은 이미 상해에서 동아일보 지국장 및 흥사단 원동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었고 재만 한인들의 토지소유권 문제에도 큰 관심을 두고 있었다. 그는 만보산 사건에 대해 장학량에게 서한을 보냈으며, 국민정부 외교부장과 특별회담도 가졌다. 주요 내용은 양 민족의 오해를 풀고 우호 친선관계를 유지하자는 것이었다.³⁷⁾

7월 8일 임시정부는 남경정부와 협의한 후 외무대신 조소앙 명의의 성명서를 발표하였으며,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먼저 조소앙은 근래 한국 내에서 발생한 '화교'사건으로 무고한 중국인들이 많이 다치거나 죽게 된 원인과 인과관계를 중국 정부와 정밀히 조사하여 향후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다음으로 '화교사건'에 대한 원인은 일본 제국주의에 있다고 보았다.³⁸⁾ 만보산 사건 즉 수로문제의 촉발은 제국주의

35) 1904년 평남 平原에서 태어났다. 1923년에서 1926년까지 중국으로 건너가 杭州 英文專修學校를 졸업하였다. 대학에 재학시절부터 上海青年同盟會를 발기하고, 韓人學友會의 집행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독립운동에 참여하였다. 상해교민단의사회, 인성학교, 흥사단, 한인애국단 요인으로 활동하였다(국가보훈처, 『공훈록』 10, 1990 참조).

36) 『동아일보』 1931년 7월 6일, 「재내의 同胞는 은인자중하라」.

37) 국지훈, 「언론인 신언준의 중국에서의 민족운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55, 2016, 167쪽.

38) 대한민국임시정부가 만보산 사건을 어떻게 인식하고 대응하고 있는지 제국주의 일본은 재상해 총영사를 통해 면밀하게 관찰할 것을 요구하였다. 1931년 7월 18일 일본외무성 문서에는 “조선인 폭동 문제에 대해 당시 불조계 조선가정부(임시정부, 필자주)에서 회합하고 그 선후책에 대해 협의한 바가 있는데 그 결과 남경 거주 박정일로 하여금 남경정부의 의향을 질문케 하고 그 양상에 따라 사해 조선인의 태도를 결정하기로 하고…(하략)…”(국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22, 74쪽)라고 하여 임시정부가 만보산 사건을 어떻게 인식하고 대응하는 지 예의 주시했다.

일본이 한국인의 독립운동과 중국 국민의 혁명 능력이 연결되는 것을 차단하는 촉매제라고 분석하였다.³⁹⁾ 그리고 중국과는 다시없는 벗이며, 임시정부는 이러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중국인들에게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했다.

첫째 중국 국민정부와 민중 전체가 하나 되어 힘써 분발해서 일본인을 제압하며 한국과 중국의 자주독립을 힘써 도모하기를 바랍니다. 둘째 중국 국민 정부와 동삼성의 관리, 인민들이 한국 교민에 대해 추방을 완화하고 함께 적을 제압할 것을 속히 도모하기를 바랍니다. 셋째 중국 언론계가 공평한 태도를 견지하여 한국과 중국 민족이 오해를 종식하고 공동의 적개심을 일으킬 수 있게 하기를 바랍니다. 동아시아의 원흉을 신속히 타도합시다.⁴⁰⁾

7월 9일 도산 안창호를 주축으로 임시정부는 상해 한인사회에서 만보산 사건으로 인한 국내 반중국인 폭동은 일본이 고의적으로 사주한 것이며,⁴¹⁾ 한국인들의 자유의지가 아님을 중국여론에 호소하기 위해 한인조직 연합회를 결성했다. 이때 참여한 주된 인물로는 조소앙, 이동녕, 김구, 박창세, 구익균, 김덕균, 강영파, 오의순, 안창호였다. 이 연합회는 임시정부 청사에서 개최되어 다음과 같은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첫째 여러 신문과 정기 간행물에 중국어 성명을 발표하여 한국에서 중국인에 대한 한국인들이 저지른 만행은 일본의 사주에 의한 것임을 선언할 것.

39) 조소앙 지음, 김보성, 임영길 옮김, 앞의 책, 210~211쪽.

40) 조소앙 지음, 김보성, 임영길 옮김, 위의 책, 212~213쪽.

41) 국내에서 화교에 대한 공격은 조선총독부의 직접적인 지시를 받고 진행된 것은 아닐지라도 그들의 암묵적인 동의 내지 방조 하에서 진행되었음은 사실이었다(정병욱, 「신설리 패, 중국인 숙소에 불을 지르다」, 341~342쪽).

둘째 이 선전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한인 거류민에게서 각출하여 사용할 것. 셋째 국민에게 이 운동이 많은 단체에 의해 지원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질 수 있도록 이 성명서에 많은 단체의 이름을 기입할 것. 넷째 대표들은 중국인들의 다양한 모임에 참석하여 한국에서 한인들이 중국인들을 학살한 것은 일본의 선동에 의한 것임을 알릴 것.⁴²⁾

1931년 7월 10일 임시정부의 김구, 김철, 이동녕, 이시영, 안창호, 조완구, 조소앙 등은 한인 농민과 중국인 농민의 수로 분쟁사건으로 촉발된 국내의 '한인폭동' 사건에 대해 중국인에게 깊은 유감을 표명하면서 제국주의 일본의 실체를 명확하게 파악해야 한다는 취지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는 다음과 같다. 다소 길지만 그 중요성 때문에 모두 인용했다.

첫째 한인 독립운동단체와 중국 내 한국인들은 만장일치로 이론상으로는 실제상으로는 동삼성에서의 일본제국주의의 명예를 벗겨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결의하였으며, 일본의 도구로 전락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거부한다. 중국 국민들은 이 사실을 인식해 주길 요청하는 바이다. 둘째 한인 독립운동 단체와 동삼성의 한국인 이민자들은 목표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동삼성의 한인 이민자들의 이해는 미래의 한국 독립운동의 성공이나 실패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 또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중국이 이 지역에서 한국인을 핍박하는 것은 중국이 동시에 한국 독립운동을 억압하는 것과 같은 의미가 된다. 우리는 이곳에서 한국인을 대우하는 데에 있어 각별한 관심을 가져줄 것을 희망한다. 셋째 중국 동삼성이 일본으로부터의 독립과 한국독립은 똑같은 운동으로 인식될 수 있다. 그러므로 중국인과 한인 이민자들은 투쟁에 있어 공동으로 협력하여야만 할 것이다. 넷째 일본이 한국인들을 일시 보호하면서 그들의 도구로 삼

42) 국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22, 2008, 74~78.

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만일 중국이 한인 이민자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한다면, 그들은 중국을 전적으로 의존할 것이다. 따라서 중국 관리와 국민들은 한인 이민자들의 정착을 도와주는 정책을 펼 것을 희망한다. 다섯째 만보산 사건은 중국 내 한인 이민자들과 현지 만보산 농민들과의 관계가 아니다. 한국인들은 일본 경찰에 의해 강제로 농사를 지으러 만보산에 끌려갔을 뿐이다. 여섯째 폭동은 전적으로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사주한 것이다. 이들 폭동사태는 東京 대지진과 山東사건 후 일어났던 것들과 흡사하다. 중국인들은 따라서 이 사건을 잘 이해할 줄 믿으며 그들의 적을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⁴³⁾

이러한 불행한 사태가 한인들 때문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일본제국주의자들의 사주에 의한 것이므로 실수를 하지 않도록 냉정하고 현명하게 사건을 직시해야 한다고 중국 국민에게 호소하였다.⁴⁴⁾ 성명문의 주요골자를 정리하면 첫째 한중 양 국민이 제국주의 일본의 도구로 전락되는 것을 중국인들에게 주지시켜야 하며, 둘째 이주한인들의 실상 즉 중국인에게 폄박받고 있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하여 이를 극복하고,⁴⁵⁾ 셋째 한중 양국이 제국주의 일본에 공동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것이다. 넷째 만보산 사건 자체를 한인들과 중국인 농민의 문제가 아니라 일제의 장기 프로

43) 국사편찬위원회, 『한국독립운동사자료』 20 임정편V(上海共同租界工務局警務處 韓人獨立運動關係文書), 「萬寶山 사건관련 韓人 소요에 대한 臨政 및 韓人 단체의 성명서」.

44) 장세운, 앞의 책, 389~390쪽.

45) 중국인들이 이주한인들에게 함부로 대하거나 멸시하거나 차별하는 행위에 대해서 임시정부는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이는 석주 이상룡의 예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석주는 1932년 吉林省 舒蘭에서 숨을 거둘 때 후손들에게 자신이 중국 땅에 망명하여 중국 법속에 따르고 심지어 의복도 중국옷을 즐겨 입었다고 중국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 즉 석주 이상룡은 중국인들과의 교류를 이어가고 이주한 인사회를 안정시키기 위한 전략이었다고 했다. 그리고 후손들에게는 한인의 정체성을 지키는 데 노력하라고 강조했다(안동독립운동기념관, 『石洲遺稿』, 648~652쪽).

젝트의 결과물로 인식하였다. 임시정부 요인들은 만보산 사건과 관련해서 상해 한인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독립운동계에도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그것도 신속하게 말이다.

뿐만 아니라 상해에서 활동하고 있는 독립운동가 박국인과 국민당원 베트남인 육중훈, 인도청년연맹 시야행은 차이나 타임즈에 ‘인도인, 베트남인, 한국인의 일본의 음모에 대한 호소’라는 글을 게재하였다. 이에 대한 전문은 다음과 같다.

아시아의 피압박 민족들이 대동단결하려고 노력하는 이때에 한국에 거주하는 많은 중국인들이 한국인에게 학살당하는 사태가 갑자기 발생하였다. 이번의 참사는 진정 역사적으로 전례가 없었으며 세계는 그 소식에 놀라고 있다. 그렇지만 한국인들은 이 사건과 무관하다. 혁명의 물결로 조국을 해방시키려는 한국인들이 중국인들을 죽일 수는 없다. 그것은 자신의 해방과 독립을 방해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간악한 일을 저지른 선동자들은 이것을 부인할 수가 없다. 우리의 약하고 압박받는 나라들이 기대할 나라는 중국이다. 이러한 연대가 실현될까 두려워하는 제국주의자들은 그들의 불법적이고 야만적인 정책을 수행하여 이후 만주와 몽고를 정복하고 피압박 민족들의 단결을 와해시키기 위하여 이런 재앙을 만드는 것이다. 중국 당국은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프랑스도 역시 베트남 사람을 선동하였고 영국도 인도인들에게 또 다른 학살을 강요했던 것이다. 피압박 민족의 단결을 추구했던 故 孫文 박사의 혁명정신에 충성으로 서약하건대 우리 동지들은 일본의 음모를 폭로하기 위하여 우리 국민들에게 전문을 보내고 우리 공동의 적에게 대항하기 위해 여기에 각자가 우리의 굳은 의지를 표하고자 한다.⁴⁶⁾

46) 『차이나 타임즈』 1931년 7월 16일, 「인도인, 베트남인, 한국인의 일본의 음모에 대한 호소」.

선언문 등을 언론에 게재하고, 중국 국민정부와의 소통뿐만 아니라 임시정부는 7월 23일 중국 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 중국인 희생자 추도식에 한태주와 김원경⁴⁷⁾을 임시정부 대표로 임명해서 참석케 했다.⁴⁸⁾

한편 1931년 7월 8일 중국 주재 프랑스 대사는 본국에 만보산 사건의 실상을 타전했다.⁴⁹⁾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렇게 크게 확대된 이 사건의 시초는 만보산(長春과 吉林 사이의 조그만 촌락)에서 수로를 만들려는 조선인 농민과 이것을 저지하려는 근방의 중국인 지주 사이의 말다툼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여러 명의 중국인이 무장하고 있었고 곧 싸움은 진짜 전투를 방불케 변질되었습니다. 중국인과 일본인의 두 경찰의 개입은 그것을 부채질했을 뿐입니다. 당연히 두 정부는 각각 이 사건의 책임을 상대방에게 전가했습니다. 그렇지만 남경의 유연한 공식 입장은 적어도 중앙정부가 우호적인 해결을 원한다는 것을 느끼게 했습니다. 물론 모든 신문에 여론을 자극하지 말라는 명령이 하달되었는데 왜냐하면 본인은 이렇게 심각한 사건에 관해 취한 신문의 입장과 범아시아적 사건과 같은 우스운 사건에 대한 신문의 입장 사이를 비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⁵⁰⁾

47) 김원경은 1898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1919년 4월 서울에서 대한민국 애국부인회를 조직하고 활동하다가 중국 상해에 수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와의 연결을 위하여 중국 상해로 파견된 후 임시정부 국무원 참사로 임명된 것을 비롯하여 애국부인회 부회장, 거류민단 의원, 인성학교 교사로 활동하였다. 특히 1922년 11월 11일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극동피압박민족대회에 애국부인회 대표로 참석하여 활동하였다(김성은, 「상해임정시기 여성 독립운동의 조직화와 특징」, 『여성과 역사』 29, 2018, 302~303쪽).

48) 국사편찬위원회, 『한국독립운동사 자료』 20 임정편V, 「大韓民國臨時政府의 동향에 대한 보고」.

49) 국사편찬위원회, 『한국독립운동사 자료』 20 임정편V(上海 佛租界 工務局 文書(낭트 소장 사료), 「만주의 反韓 소요와 조선의 反中 소요에 관한 건」.

50) 위와 같음.

그는 6월부터 만보산 지역 한중간의 갈등 현상을 국제관계 속에서 파악하였다. 먼저 중국 국민정부(남경)에서 만보산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고 처리하는 지, 그리고 이주한인에 대한 무력 사용이 압박함을 경고하였다. 프랑스 외교관은 당시 그의 외교관시절 일본 외교관 重光葵에게 전해들은 만주지역에 대한 일본의 무력 침략 사실도 적시하였다. 그는 현재 피해가 속출하고 있고 만일 중국정부가 현명하게 조치하지 않으면 일본정부는 아마도 무력을 포함한 군사적 개입을 취할 것이며, 그 이유로는 만주의 일본거주민 및 한인에 대해 복수일 것이라고 판단했다.

2. 조소앙의 만보산 사건 대응 : 혐오와 차별의警戒

3·1운동의 적장자로 탄생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이론적 토대를 구축한 이는 조소앙이다. 그는 새로운 국가건설의 비전을 끊임없이 제시하였다. 대한민국임시정부 요인으로 활동하면서 다양한 정책방향과 국체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지대한 영향력을 발휘한 조소앙의 활동상은 만보산 사건에서도 분명히 드러났다. 그는 일제가 시행한 대륙침략의 본격적인 신호탄을 도외시할 수 없었다.

만보산 사건 당시 임시정부 외교부장이었던 조소앙은 한국 내 화교 사상자 발생에 대한 인과관계 및 제국주의 일본의 연결고리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는 취지의 선언문을 발표하였다.⁵¹⁾ 이 선언문에서는 먼저 한국 독립운동과 중국 국민혁명의 동반자적 관계를 강조했다. 한국은 경술국치 이후, 중국은 1911년 신해혁명 이후 민족의 자주독립과 혁명을 위해 20년간 매진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가장 큰 적은 제국주의 일본이라는 것이다.

51) 조소앙 지음, 김보성, 임영길 옮김, 앞의 책, 210~211쪽. 일제 정보 당국은 만보산 사건의 성명서는 조소앙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공동원수 일제와 공동항일투쟁을 위해서는 “동삼성(만주)의 한국 교민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상 사람들이 번번이 동삼성의 한국교민은 한국독립당과 일본제국주의자가 옹호하고 중국인이 미워하는 무리이다“라고 말합니다. 아, 어찌 그리도 사정을 모르단 말입니까. 동삼성의 한국 교민이 한국독립당의 친구라면 일본의 적이지 중국의 적이 아닙니다. 동삼성의 한국 교민이 중국 적이라면 일본의 친구이니 실제로 한국독립당의 적입니다. 어떻게 중국의 적이 도리어 한국독립당과 일본인의 친구가 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이른바 커다란 수수께끼입니다. 오늘날 排華하자는 말이 이 같은 수수께끼에서 생겨났으니, 중국의 분노도 여기에서 격발된 것입니다. 저 교활한 일본인이 먼저 수수께끼를 만들고 나서 한국과 중국 양측이 수수께끼에 미혹된 틈을 타 다시 한국에 두 번째 수수께끼를 만들어 냈으니, 화교사건이 그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한국독립당은 본디 한국교민을 옹호하여 압박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안전하기를 요구하고 있으나 사람들이 그 행동을 같다고 말하면서 의심하는 일은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비록 그렇지만 한국독립당의 목적과 수단이 과연 한국 교민과 관련하여 일본 제국주의자와 그 실상이 같겠습니까. 한국독립당에서 이른바 한국 교민의 개념 내포가 과연 일본 제국주의자와 그 바탕이 같겠습니까. 한국 교민에 대한 개념의 내포, 수단과 목적이 어느 것이 같고 어느 것이 다르며, 어느 쪽이 그릇되고 어느 쪽이 바른지 마땅히 사실에 의거하여 명백히 분석한 뒤에야 수수께끼가 비로소 풀릴 것입니다. 분명히 알려주시기를 청합니다.⁵²⁾

제국주의 일본이 만주지역을 침략하기 위해 만보산 사건을 교묘히 활용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임시정부에 대한 일제의 음해공작은 본질적으

52) 조소앙 지음, 김보성, 임영길 옮김, 앞의 책, 215~216쪽.

로 만주 지역 이주한인과의 분리정책으로 연계되었다. 따라서 지역의 차이, 수단의 차이, 교양과 희망의 차이, 경영태도의 차이, 개념의 차이, 수량의 차이가 있음을 분명히 밝혔다.⁵³⁾ 조소앙은 이러한 차이 속에서 만주 지역 이주한인(한국교민)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첫째 중국 국민당의 원칙에 따라 국내의 소수민족 정책도 예외 없이 평등해야 하며, 둘째 한국의 독립운동에 원칙적으로 공감을 표하고, 셋째 이론상 일본인이 나라의 원수임을 인식하고, 한국인이 혁명 동지임을 인식하며, 넷째 수치상으로 일본인 가운데 동삼성에 투자하고 무기를 지닌 사람이 동삼성의 한국 교민보다 많다는 점을 숙지하며, 다섯째 보금자리를 잃은 이웃 백성에게 공감을 표하고, 여섯째 나라를 위해 충성을 도모하는 사람이 많다는 점, 일곱째 역사적으로 원수를 갚기 위해 괴로움을 견디는 곳이 바로 만주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⁵⁴⁾

조소앙의 이러한 인식은 제국주의 일본의 만주정책의 실행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특히 만주지역은 제국주의 일본의 대륙침략을 위해 긴밀하게 움직이고 있던 관동군의 독무대였다. 물론 일본외무성과 조선총독부 등이 이를 견제하면서 대륙침략에 보조를 맞추었지만 실질적으로 관동군은 무력행사를 통해 이른바 '만몽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 1931년 3월 참모본부에서는 만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만주 점령 정책이 필요하다고 결론지었다.⁵⁵⁾ 만보산 사건이란 제국주의 일본의 만주침략 과정 속에서 이주한인을 매개체로 활용한 교활한 정책이었다는 점을 조소앙은 인식하였다.⁵⁶⁾

53) 조소앙 지음, 김보성, 임영길 옮김, 위의 책, 216~217쪽.

54) 조소앙 지음, 김보성, 임영길 옮김, 위의 책, 218~219쪽.

55) 中山融志, 『關東軍』, 東京: 講談社, 2000, 86쪽. 관동군에서 활동했던 밀정들의 역할은 이주한인과 중국인들의 정보 수집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정책을 통한 제국주의 정책의 실현이었다.

56) 『매일신보』는 중국 각지에서 排日 시위를 획책하고 있다고 보도하였으며, 만보

조소앙은 만주지역 이주한인의 존재 자체를 중시했다. 도산 안창호가 1920년을 임시정부의 독립전쟁 원년이라고 선포했던 가장 중요한 배경에는 3·1운동과 만주지역 독립군의 존재가 있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만보산 사건으로 이주한인들이 또 다른 차별과 박해, 이용을 당한다면 장기적인 독립운동이 곤란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만보산 사건과 중국인 배척 사건을 어떻게 인식하고 처리하는 것은 임시정부의 존립 자체를 위협할 수 있는 요소였다. 조소앙은 이러한 문제를 불식하기 위해 중국 국민정부와 중국인에게 다음과 같은 대안도 제시하였다.

하나, 한국 교민 전체와 만보산을 개간한 농민은 절대로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또한 만보산 사건이 알려진 것은 농민들의 의식적인 행보가 아니라 실제로 일본의 군대와 경찰들이 자진해서 나섰기 때문에 이러한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만약 일본의 군사력이 미치는 지역이 아니었다면 한국 교민 농가와 중국인 지주 사이에 반드시 충돌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중국 민중은 이러한 점을 분명히 꿰뚫어 보기 바랍니다. 하나, 이번 한국 내에서 발생한 화교 사건의 원인은 오로지 일본 제국주의가 만들어 낸 것으로 실제로 도쿄 대지진 때와 산둥에 출병했을 때의 대규모 살상 사건과 다르지 않습니다. 중국 국민은 그 간교한 계책을 간파하기를 바랍니다. 다만 우리는 우방의 교민이 한국 내에서 무고하게 죽음을 당한 것을 사전에 막지 못하여 마음 속으로 우방에게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중국 관리와 인민들이 하나되어 노력을 기울여 단기간에 적을 없앨 것을 맹세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은 반드시 기꺼이 그대들과 함께 일어날 것입니다.⁵⁷⁾

산 사건의 여파가 일본인에게 향하고 있음을 의도적으로 기사화했다(『매일신보』 1931년 7월 10일, 「중국각지에서 배일 데모 획책」). 이러한 기사들은 자칫 한국과 중국인들의 문제를 일본인이 그 피해를 받고 있다는 인상을 주기 쉬웠다.

57) 조소앙 지음, 김보성, 임영길 옮김, 앞의 책, 220~222쪽.

조소앙으로 대표되는 임시정부의 만보산 사건 인식과 대응은 크게 3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만주지역에 거주하는 이주한인에 대한 지위가 안정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한국 교민이 중국 지방관에게 압박을 받으면 제국주의 일본의 도구로 전락할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하며, 이를 중국에서 명확하게 인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둘째 임시정부와 만주지역 한인은 강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했다. 만주지역 한인=임시정부 인적 자원루트라는 공식이 상존하고 있었다. 셋째 만보산 사건으로 인한 불필요한 전선 확대를 경계하고 만보산 사건의 본질을 중국인들에게 알려 공동 항일투쟁의 전선을 구축하려고 했다. 특히 한국 내 발생한 화교사건의 원인이 제국주의 일본이 만들어 낸 간교한 계책임을 중국인들도 간파해야 한다고 했다.⁵⁸⁾

한편 만보산 사건 두 달이 지난 9월 18일 관동군이 북대영을 급습하여 촉발된 만주사변(9.18사변)에 대해 임시정부는 신속한 규탄대회를 통해 한중공동항일 투쟁 노선을 견지하고자 했다.⁵⁹⁾ 만보산 사건과 만주사변의 인과 관계를 중시했던 결과로 보여진다. 조소앙이 일본의 만주 점령에 대한 중국 국민정부에 보내는 편지가 이를 반증한다.⁶⁰⁾ 만보산 사건으로 임시정부는 새로운 독립운동의 방략을 모색하게 되었다. 독립전쟁과 외교론, 나아가 폭탄을 이용한 침략기관 파괴 및 제국주의자 암살과 같은 다양한 방안이 모색되었다. 그것은 한인애국단의 결실로 나타났다.

58) 조소앙 지음, 김보성, 임영길 옮김, 앞의 책, 222쪽.

59) 석원화·심민화·패민강 엮음, 김승일·이은우 옮김, 『대한민국임시정부 관계기사 선집』, 범우사, 2001, 212~213쪽.

60) 조소앙 지음, 김보성, 임영길 옮김, 앞의 책, 175쪽.

V. 맺음말

1931년 6월의 만보산 사건 때 시찰을 위해 만주에 갔던 政友會의 일본인 정치가들을 동행한 적이 있습니다. 본인은 녹막염 때문에 고생했었는데... (이하 낙장)...⁶¹⁾

중국 상해 등에서 친일활동을 하면서 정보를 수집하였던 李元鎬가 만보산 사건 때 일본 정치가들과 함께 만주 현지를 시찰한 내용이다. 지금부터 91년전 만주의 한 공간에서 벌어졌던 민족 간의 생존 갈등의 여파는 큰 상처를 내고 봉합되었다. 이 글에서는 만보산 사건의 배경과 전개과정, 임시정부의 인식과 대응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1910년 8월 대한제국이 강점되면서 만주로의 한인 이주는 빠르게 증가하였다. 토지에서 유리된 농민들이 대부분이었다. 이들은 만주지역에서 수전으로 정착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크고 작은 현지 한족들과 갈등이 발생했다. 그 과정에서 발생한 만보산 사건은 한중 농민문제에서 동북아 전체의 문제로 확산되었다. 차별의 일상화로 발생했던 만보산 사건은 민족 간의 혐오와 갈등이 표출된 것이며, 그것은 민족 간의 학살의 조짐까지 보일 정도였다. 한반도로 혐오의 공간적 팽창이 일어나면서 상황은 무척 심각해졌다. 화교에 대한 공격과 살인의 광풍은 평양과 인천 등에서 일어났다. 100여 명 이상의 화교들이 살해되었다. 여기에는 민족적 혐오가 내재되어 있었다. 중국인 노동자에 대한 폭력행사는 피압박 민족의 또다른 자화상이었다.

61) 국사편찬위원회, 『한국독립운동사 자료』 20 임정편V(上海共同租界工務局警務處 韓人獨立運動關係文書), 「李元鎬의 활동에 대한 건」.

만보산 사건에 대해 임시정부에서는 자칫 이 문제가 중국에서 활동하는 많은 독립운동가, 독립운동단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처했다. 먼저 상해에서 활동하고 있던 언론인 신언준을 통해 국내 언론에 ‘조선의 동포는 은인자중해야 하며’, ‘만보산 사건은 조선농민과 상관없는 상조권’ 문제라는 기사를 실었다. 특히 ‘이 천만 동포에게 고합니다’라는 기사는 민족 간의 대결과 갈등 양상이 또 다른 비극을 초래할 수 있음을 경고하는 글이었다. 제국주의 침략을 받고 있던 피압박 민족이 다른 민족에게 혐오와 배타의 폭력적 형태를 통해 의견을 표출한다는 것은 또 다른 차별의 고착화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특히 7월 8일 외무부장 조소앙을 통해 성명서를 발표하게 하였다. 그 성명서는 만보산 사건과 화교배척 사건으로 무고한 중국인들이 많이 다치거나 죽게 된 근본적 원인을 정밀히 조사하여 향후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를 국민정부와 중국인에게 호소하였다. 그리고 김구, 안창호 등 임시정부 요인들은 마당포 임정청사에서 한국인이 중국인들을 학살한 것은 일본의 선동에 의한 것임을 알리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또한 7월 23일에는 중국 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 중국인 희생자 추도식에 임정 요인을 파견하였다.

이와 같은 임시정부의 인식과 대응은 무엇보다도 일본제국주의의 대륙침략에 만주지역 이주한인들이 이용되고 있었음을 선전하는데 집중되었다. 특히 만보산 사건 자체를 중국 국민정부에서 방관할 경우 만주는 일본의 차지가 될 수 있음을 알렸다. 이는 만주의 이주한인이 지금까지 중국 지방관헌과 현지 한족들의 차별을 감내하고 정착하였음을 국민정부에 알리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만보산 사건의 근본 문제이자 이주한인들의 생존권 문제였던 상조권에 대한 중국 정부의 근본 대책을 호소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러한 대응은 1931년 9월 18일 관동군이 심양의 북대영을 공격한 이른바 만주사변으로 어렵게 되었다. 오히려 만주사변(9.18)을 계기

로 한중 양국의 공동투쟁만이 고조되는 형국이었다. 이듬해 성립된 만주국은 五族協和를 강조하면서 민족간의 갈등을 봉합하려 했다.

오늘날 한국 서울의 대립동을 중심으로 형성된 중국인(조선족 포함) 정착지에서 또 다른 민족 간의 갈등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조선족은 언어 소통의 강점을 가지고 노동시장에서 우위를 차지하면서 漢族들을 통제하려 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갈등이 표출되었다. 21세기 민족간의 사소한(?)의 갈등의 실체를 우려하는 것이 지나친 기우는 아닐 것이다.

(2022.02.16. 투고 / 2022.03.07. 심사완료 / 2022.03.16. 게재확정)

[Abstract]

**The Korean Provisional Government's perception and
response to the Manbosan incident**

: Blocking the spatial expansion of disgust and discrimination

Kim, Jooyong

What triggered the crisis in Northeast Asia in the 20th century was the hatred between communities and the resulting explosion of national discrimination and conflict. This article identified that the Manbosan incident in Manchuria (northeast China) in July 1931 was a phenomenon of spatial expansion of hatred and discrimination, and identified the position of the temporary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which actively responded to it. Since its establishment in Shanghai in April 1919, the provisional government has served as the headquarters of the Korean Independence Movement. However, it faced difficulties due to insufficient funds and human supply and demand. In particular, as the Manbosan case and the Chinese exclusion case were linked within the Korean Peninsula, the provisional government clearly declared hate and discrimination. This is because even if it was the Manbosan Mountain incident caused by Japanese imperialism, China's view of it was not good.

Therefore, the provisional government proposed a solution to the Manbosan case in the name of the Foreign Minister Cho So-ang, which was a proposal to realize peace by overcoming ethnic hatred

and discrimination in Northeast Asia and seeking joint countermeasures against imperial Japan. It was the temporary government's countermeasure against the Manbosan incident that tried to form a joint consultative body between symbiosis and co-prosperity.

□ Keyword

Manbosan Incident, Disgus, Discrimination, Overseas Chinese(華僑), Provision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Jo So ang

[참고문헌]

- 『救亡日報』, 『별건곤』, 『동아일보』
- 金三民, 『在滿朝鮮人の窮狀と其の解決策』, 新大陸社, 1931.
- 朝鮮總督府警務局, 『在滿朝鮮人ト支那官憲』, 1930.
- 고정휴 외, 『대한민국임시정부의 현대사적 성찰』, 나남, 2010.
- 국사편찬위원회, 『한국독립운동사 자료』 20(임정편 V), 1991.
- 국사편찬위원회, 『중국한인의 역사자료집 -재외동포사총서』 15, 2013.
- 권대웅 외, 『해산 김정묵과 가문의 독립운동』, 도서출판 선인, 2021.
- 김광재, 『상해한인사회사 연구』, 경인문화사, 2018.
- 김주용, 『한국독립운동과 만주: 이주·저항·정착의 접이지대』, 경인문화사, 2018.
-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국외 항일운동 유적지 실태조사 보고서』 1, 2002.
-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 4(임시정부사), 1983.
- 朴永錫, 『萬寶山事件研究』, 一潮閣, 1978.
- 박환, 『만주지역 항일독립운동사 답사기』, 국학자료원, 2001.
- 석원화·심민화·패민강 엮음, 김승일·이은우 옮김, 『대한민국임시정부 관계 기사 선집』, 범우사, 2001.
- 손춘일, 『해방전 동북조선족 토지관계사 연구』, 길림인민출판사·연변교육출판사, 2000.
- 신주백, 『1920~30년대 중국지역 민족운동사』, 도서출판 선인, 2005.
- 장세운, 『중국동북지역 독립운동사』, 도서출판 선인, 2021.
- 조소양 지음, 김보성, 임영길 옮김, 『소양집』, 한국고전번역원, 2019.
- 中山隆志, 『關東軍』, 講談社, 2000.
- 고바야시 레이코, 「만보산 사건과 리튼보고서-재만조선인에 관한 조사결과

- 를 중심으로-], 『만주연구』 11, 2011.
- 국지훈, 「언론인 신언준의 중국에서의 민족운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55,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16.
- 손승희, 「만보산 사건과 중국 공산당」, 『동양사학연구』 83, 동양사학회, 2003.
- 손승희, 「만보산 사건과 중국의 언론」, 『역사문화연구』 28, 한국외국어대 역사문화연구소, 2007.
- 손승희, 「1931년 식민지조선의 배화폭동과 화교」, 『중국근현대사연구』 41, 2009.
- 손승희, 「근대 한중관계사의 새로운 시각 모색 -萬寶山事件 연구에 대한 적용가능성을 중심으로」, 『역사학보』 202, 2009.
- 송한용, 「張學良정권의 對한인정책」, 『만주연구』 11, 2011.
- 윤상원, 「만보산 사건과 조선인 사회주의자들의 중국인식」, 『한국사연구』 156, 2012.
- 이준식, 「만보산 사건과 중국인이 조선인식」, 『한국사연구』 156, 2012.
- 정병욱, 「신설리 패, 중국인 숙소에 불을 지르다-1931년 반중국인 폭동에 대한 재해석」, 『역사비평』 97, 2012.
- 최병도, 「만보산 사건 직후 화교배척사건에 대한 일제의 대응」, 『한국사연구』 156, 2012.